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등
검 토 보 고 서

<제159회 임시회>

2007. 5. 10

달 성 군 의 회
전문위원 김 정 현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검 토 보 고

1. 개 요

1. 발의연월일 : 2007년 5월 3일
2. 발 의 자 : 서정우 의원 외 7인(의원 공동발의)
3. 제정이유

- 노인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수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여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 사상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4. 주요내용은

가. 장수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 달성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만 90세 이상의 노인

나. 장수수당 지급액 및 지급기준일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지급액은 만 90세는 50만원, 만 95세는 70만원, 만 100세는 100만원으로 5년 단위로 지급하며,
- 지급기준일은 만 90세, 만 95세, 만 100세가 되는 날로 함.

다. 장수수당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라. 장수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 지급기준일 현재 사망·관외전출이나 수령을 거부한 경우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경우 등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노인들이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장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 사상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서로 분담하고 노무보 봉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최근 전국자치단체에서 장수수당의 지급을 확대하는 추세임.

이에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의 보장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짐.

<참고자료>

장수수당 지급 관련 소요예산 판단

(단위 : 원)

구 분	노인수	1인당 년 지급액	소요예산	비 고
계	232명		127,300,000	
만90세 이상	180명	500,000	90,000,000	
만95세 이상	49명	700,000	34,300,000	
만100세 이상	3명	1,000,000	3,000,000	

관 계 법 령

[노인복지법]

제2조 (기본이념) ①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발의연월일 : 2007년 5월 3일
2. 발 의 자 : 채명지 의원 외 7인(의원 공동발의)
3. 제정이유

○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농작물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

4. 주요내용은

가. 보상요건 및 제외대상 규정(안 제3조, 제4조)

-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실경작자에게 지급
- 피해면적이 330㎡ 미만, 산정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등

나. 농작물 피해면적 및 피해액 산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필지별 경작면적 대비 피해율을 적용하여,
피해면적에 보상단가를 곱하여 산정

다. 피해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최대 100만원까지 현금으로 보상

라.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및 심의기능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1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
- 피해보상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하지 않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보상규정을 마련하여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최근 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수렵금지 등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면서 개체수가 급증함에 따라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원함으로써 현재의 어려운 농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적절한 조례안으로 여겨짐.

관 계 법 령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야생동물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보호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31>

1.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4.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5.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 공원구역
 7.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6.11, 2001.4.7, 2007.4.11>

1~4호: 생략

5. "농작물"이라 함은 식용작물·공예작물·사료작물·녹비작물·원예작물·균이작물 및 뽕나무를 말한다.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기준)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농업인이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출연월일 : 2007년 5월 4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세무과장)
3. 개정이유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금년부터 적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재산세 감면요건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감면근거를 마련코자 함.

4. 주요내용은

가.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안 제7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자)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

나.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안 제26조)

-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및 기업도시개발 구역에 입주하는 기업
 - 최초 재산세를 5년간 면제, 그 후 3년간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
- 감면세액의 추정
 -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해제 및 입주한 기업이 폐업한 경우
 - 부동산 취득후 3년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2년 이상 당해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기업도시개발을 위한 재산세 감면요건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판단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리는 다음과 같다.

제1호~제8호 생략

제8호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라 함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금의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공사가 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이어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3조의2(연금의 방식 등) ①항: 생략

② 법 제2조제8호의2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이란 65세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개정 2006.12.30>

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당해 구역안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
 2.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 이후 당해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15년의 범위안에서 감면비율·공제비율과 감면기간·공제기간을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의 감면 또는 공제 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2조를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1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제4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을 말한다)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조업

2. 엔지니어링사업
 3. 부가통신업
 4. 연구 및 개발업
 5.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6.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 제104조의6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8. 제116조의2제3항제3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사업
 9. 제116의15제1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
- ②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③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이 당해 구역안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감면대상소득은 제1항 각호의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당해 구역안에 투자한 시설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 ④법 제121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7조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건설교통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구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5항의 규정은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개발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개발구역의 지정목적에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민간기업 등을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민간기업 또는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업과 협의하여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고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민간기업은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그 지정 전에 토지매입비 및 부지조성공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조성비의 20퍼센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자기자본 및 투자자금(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금융기관이 대출확약을 한 자금을 포함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개발사업 자본의 지분비율의 합은 민간기업의 지분비율의 합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할 수 있다.

1. 혁신거점형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경우
2. 그 밖에 개발사업의 시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개정 1998.12.31>)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②삭제 <1988.4.6>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1998.12.31>